

민주 사법개혁 속도전에 장외투쟁 나서겠다는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초강경 모드
긴급의총 열어 방식·시기 논의...장의 여론전 보수층 결집 의도도

국민의힘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국회 밖 장외투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국회 답장을 넘어 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 방식과 시기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외로 나가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도부 논의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배경에는 여권의 사법부 공격을 저지하려면 제1야당이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자체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 지도부는 국회 내외 병행 투쟁을 공식화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을 바꿨지만, 헌법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맡은 사건 전부를 전담재판부가 다룬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장지권이 재판부 인사 배정에 관여해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꾸린다는 건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강경 메시지 발신과 함께 당원 결집에도 나섰다. 이날 중 시·도당별로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정치 탄압 실상 당원 교육'을 실시해 향후 장외집회의 주축 세력을 조직하려는 계산이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와의 접점을 넓혀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도 눈에 띈다. 장 대표는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을 잇따라 만나 교계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해병 특검팀 압수수색, 손현보 목사 구속 등을 "이재명 정부의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교계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신중론도 공존한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광장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며 "외부 연대가 '윤아게인'과 맞물려 국민에게 부담스럽게 비칠 수 있

다. 지도부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장외보다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대거 모아 투쟁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준비와 함께 국회 내 대응 수위도 높일 심산이다.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안이 이날 의총에서 논의됐다. 여권의 재판부 개편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국회 밖 투쟁'과 '의회 안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요구와 대법원장 퇴진 압박에 맞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북·대미 외교·안보 현안 치열한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조현 장관 "시진핑 주석 APEC 참석 가능성 크다"

국회 이틀째 대정부 질문은 총리와 외교·국방 수장의 답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며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민감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16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부 국무위원의 과거 방북 이력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 질의에 "정권에 반대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던 과거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안한 'APEC 경주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나눈 질문에는 "논의 중인 내용이 있다"고 답하며 외교적 성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총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둘러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과 대미 투자 문제 등을 집중 추궁받았다. 김 총리는 "꼭 APEC 참석이 아니라더라도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만남을 갖는다면 바람직하다"며 "직접 제한한 적은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간접적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의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협상과 관련해선 "최종 협상 결과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형태가 되면 반드시 절차를 밟겠다"며 국

회 동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내 비자 구급 사태에 대해선 "100일 내 해결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반드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문서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당시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후속 협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산물·쇠고기·쌀 등 핵심 현안에서 추가 양보 없이 방어했고 지금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려워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또 "국민에 부담을 주는 합의라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하겠다"며 "미국에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제안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국 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접경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조정 문제를 설명하며 "지역별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최대 5km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여야 고성 충돌

국힘 집단 퇴장 속 무기명 투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여야 충돌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고 선언했으나, 국민의힘은 "관례를 깨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투표는 민주당 의원만 참여해 총 10표 전원 부결로 결론 났다. 간사 선임은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의의 없이 호선 처리해온 것이 국회 관례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표결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빌미로 일방적 운영을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의 간사직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전례 없는 절차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간사직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군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조선 발언,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용산관저를 드나든 사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최소한 사과부터 해

야 하는데 '관행'만 내세우며 선임을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던 인사가 버젓이 법사위에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있는데 나 의원만 문제 삼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격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직접 패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며 나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결국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은 무산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법사위를 넘어 국회 전반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간사 선임 문제를 계기로 정면 충돌을 벌이면서 향후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추석 후 국정감사’ 잠정 합의...10월 13일 돌입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로 잠정 합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추석 전 국정감사를 시작해 연휴 기간 여론의 화두를 선점할 구상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불발됐다. 상임위 가운데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유일하게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

정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있어 미리 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외통위의 국내감사는 10월 13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각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한다. 이튿날인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종합감사는 28일 실시한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아주반·미주반·구주반으로 나뉘 총 32개 공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